

〈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〉

정동영 통일부장관, 「중대 제안」 설명 기자회견(요지)

〈 2005.7.12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보고 〉

-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안보 현안임.
 - 참여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오늘까지 북핵 불용, 평화적·외교적 해결, 주도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.
- 정부는 「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」을 2005년도 안보정책의 전략과제로 설정한 바 있음
 - 그리고 정부는 금년 초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 연기 선언 직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른 바 “중대제안”을 마련하였음.
- 지난 5.16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정부가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통보하였고,
- 6.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, 이를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하였음

- 이제 4차 6자회담의 7월말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“중대제안”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,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하였음.

【 중대 제안 개요 】

-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“중대제안”이란

-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
-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
- 우리가 독자적으로
-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

- 다시 말해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, 현재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요구하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고, 그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임.
- 우리의 ‘중대제안’은 북핵 해결의 경제적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에너지를 대신하여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
-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3차 6자회담을 통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 제공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 요소와 결합하게 될 것임

【 추진 배경 】

- 이번 '중대 제안'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대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그리고 남북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임.

첫째,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,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임.

-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의 경제·사회적 안정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됨
-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였음
-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함

둘째,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.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짓는 데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북한에 대해 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임.

- 현재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되었던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된 상태임.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, 우리측은 최소한 잔여 공사비 35억불 가운데 70%인 24억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.

- 그런데 이번 제안의 핵심요소인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 설비 건설 등에 소요될 비용은 이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.
- 대북 송전여력 문제는 향후 10여년간 전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2008년 이후부터 200만Kw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셋째, 이번 제안이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임.

-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,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남북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임

【 4차 6자회담 의의 】

- o 4차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선 안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함.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함.
- o 이미 북은 6.17 면담에서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 물론 주변국이 우려하는 핵물질 이전이나 핵실험과 같은 상황 악화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바 있음.

- 이제 4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.
-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오늘 “중대 제안”의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렸음.
- 끝으로 사안의 성격상 국민 여러분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.
- 앞으로 정부는 여·야 정치권, 그리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임.